

하반기 경제운용 무엇에 역점 뒀나

인플레 우려 은행 대출 옥 쥘다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강만수(왼쪽에서 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08.7월)	수정(08.7월)
〈전망 정책〉		
국제유가(두바이)	80달러	110달러
세계경제 성장률	4.1%	3.7%
미국 성장률	1.5%	0.5%
〈경제 전망〉		
GDP성장률	6% 내외	4% 내외
소비자 물가	3.3% 내외	4.5% 내외
경상수지	-70억달러 내외	-100억달러 내외
취업자 증가	35만명 내외	20만명 내외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

과 제	실 천 전 략
물가안정 노력 강화	-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동결(7월까지) - 지자체 협조를 통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유도(6월) - 올해 중료 긴급할당관세 전면품목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12월까지)
민생안정 지원 강화	- 농민 화학비료 상승부담 3분의 1 지원(6월 19일부터 소급 적용)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8월부터) - 소상공인 네트워크 도입(8월부터) - 휴대전화 감면제도 대상·혜택 확대(10월부터) -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방안 마련(10월부터) - 주택바우처 시범 사업 모형 개발(11월까지)
일자리 창출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5월부터) - 실업자대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 도입(9월부터) - 청년인턴제 도입방안 마련(10월까지) - 보육료 전차비우체 도입(11월까지) - 임금피크제 확산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12월까지) - 연가연금지도 기산율 상향조정 방안 마련(12월까지)
성장잠재력 확충	- 수도권 지역·지구제 합리화(12월까지)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12월까지) - 기준평균연비 기준 강화(12월까지)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 마련(12월까지) - 해외식량기지 설립방안 마련(12월까지) -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추진 -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범도입(10월까지)

대기업 인수·합병 대출도 억제

■ 금융 정책

정부는 과도한 시중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물가 급등이 유가 등 공급 측면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에서도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합병 대출도 억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수요 부분의 역할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잉 유동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가 하강하는 과정에

서 금융회사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경기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금리 조정과 같은 광범위한 통화신용정책을 썼다간 급격한 신용경색을 유도해 가뜰이나 어려운 한계 계층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미시적인 정책을 구사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대출 급증이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상수도 공공요금 동결

■ 물가안정 대책

정부가 제시한 각종 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됐다. 이는 최근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유가·고물가가 가속화하고 일자리 상황마저 여의치 않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도 물가안정 방안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17개 중앙공공요금 중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가능한 것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지자체 관할인 상하수도·쓰레기봉투료 등도 동결을 유도하되 일부 불가

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제도와 관련, 현재 적용 중인 82개 품목에 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특정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원칙 하에 민생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와 관련해 기초수급자에게는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혜택을,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의 신규진입을 확대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료 올려 절약 유도

■ 에너지 대책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결정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도 급등하면서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분의 절반인 1조2천억원을 지원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원가 상

승을 반영해서 인상할 방침이다.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낮은 상태의 요금체계를 놔두면 적자가 계속 발생해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장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상승과 국제가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kWh 당 전기요금인 77.85원로 미국의 82.27원, 일본의 123.78원 등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주거안정 주택 바우처 도입

■ 민생안정대책

주택 바우처와 청년 인턴제는 취약 계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정책이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바우처(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주택 바우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10월께 용역

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득 하위 20%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주면 임차인이 이를 집 주인이나 임대 사업자에게 내는 것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년 인턴제는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인턴으로 6개월 간 계약하면 인턴 기간 중 1인당 매월 임금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연합뉴스

“유가 올라 ‘747’전략 수정 불가피”

강만수 장관 일문일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불안 등으로 올해 거시경제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정부가 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과 문답. -‘747’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인가. ▲당초 3월에 전망할 때는 유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규제완화 및 감세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면 6%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가 그 이후 50%나 더 올랐고 앞으로도 쉽게 내려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2012년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럼 7% 성장은 2012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그전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7% 성장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상반기 경제운용을 평가해 달라 ▲우리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최근 3~4년간 경성축자가 매년 반으로 줄어들고 외채도 지난 2년간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 대외균형이 깨지면 소규모 개방경제는 견딜 수가 없다. -유동성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됐다. ▲과잉유동성 여부는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다. 최근 M2(광의통화) 성장이 경제 성장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많을 때에 작을 때보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광역 경제권 구상이 모호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지역 균형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행정 단위별 발전 계획을 만들었다. 7월 말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전기·가스 요금 어떻게 오르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검토중이다. 원유값과 석탄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 흡수하고 불가피하다면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 /연합뉴스

